

시론



김영식

前남부대학교 교수·국제웃음생명연구소장

과거에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무더위가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지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10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고 싶다. 계절의 변화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복잡한 질문에 단 몇 초 만에 답하고, 스마트워치가 심박수와 수면 상태까지 알려준다.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전 세계와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편리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현대인의 마음은 더욱더 외롭고 불안해지고 있다.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가위 명절을 보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부모와 조상에게 무엇을 물려받고, 또 무엇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는가?” 사람의 기질과 스트레스 반응에는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성장환경과 생활 습관, 경험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최근 주목받는 후성유전학 역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운명의 바코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조상에게 물려

웃음 유전자로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받은 삶의 흔적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웃음 유전자’라는 표현을 생각해 본다. 의학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뜻한다. 오랫동안 웃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

“웃음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웃음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정서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고 기분과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웃음 하나가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운명 철학을 연구하는 한 분이 여러 차례 강의를 함께한 뒤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김 교수님은 원래 타고난 운명의 길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그 길을 바꾼 것이 바로 웃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부에서 답을 얻었다고 좋아하셨다. 물론 웃음 하나로 운명이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웃음과 울음의 조화다. 신은 인간에게 웃음과 울음이라는 특별한 감정을 선물했다. 우리는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운다. 때로는 감격 스러워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흐르기도 한다. 웃을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웃고, 아픔에 함께 울어주

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손을 잡아 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며,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건네는 일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AI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은 단순히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계산하는 능력만은 아니다.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웃고, 때로는 함께 울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다움이다.

계절의 여왕 10월, 과거의 아픔에만 머물지 말자. 물려받은 삶에만 갇히지도 말자. 오늘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웃음은 과거를 지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어쩌면 먼저 떠나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오늘의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며 따뜻한 미소로 응원하고 기릴 것이다. 그 작은 웃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삶을 만들고, 다음 세대에 따뜻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웃음이 생명을 살리고, 웃음이 사람을 살리고, 웃음이 세대를 잇는다. 아름다운 삶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새롭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서 빠르게 달려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속 웃음 유전자를 “ON”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스위치는 “OFF”하는 것이다. 오늘도 웃자. 그리고 그 웃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기고



이현

前광주시 남구 부구청장

정부가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재정운용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수가 많이 건널 때 일부를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하고, 세수 감소 기에는 재정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국제 수입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거나 줄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의 우려도 결코 작지 않다. 실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와 재정지출을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재검토 의견을 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일정한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방으로 내려오는 돈의 총액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정부는 2027년 지방교부세를 7조2천억원으로 편성해 2029년보다 7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전체가 곧바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역별 배분 세부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 시대, 지방재정도 먼저 준비해야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고 해서 남구의 보통교부세가 직접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지만, 통합특별시의 자율재원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나 시비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남구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험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새로운 국가재원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준비가 더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부터 ‘미래대응기금 대응사업 목록’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남구의 경우 대촌·송암권 배후도시, 청년정주, AI·반도체 인재 정착, 백운광장 도시재생, 광역교통, 문화·교육 인프라 등 기존 현안을 각각 따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남구 미래성장 패키지’로 묶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산업단지가 반드시 남구 안에 있어야만 미래산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첨단산업 종사자들이 어디에서 살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문화를 누릴 것인지까지 고려한다면 남구는 충분히 미래산업의 배후 정주도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책시설 유치는 분명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다. 하지만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가진 핵심 공유재산을 사실상 매우 낮은 보상으로 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옛 보훈병원 부지와 송암근린공원·노대동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약 1천억원 상당의 구유재산으로 평가받는 옛 보훈병원 부지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검토하는 토지보상비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사업 유지를 위해 지방의 자산부터 신의로 내놓는 방식이 최선인지, 국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역의 공유재산도 함께 지킬 수 있는 다른 전략은 없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일수록 당장의 성과보다 10년, 20년 뒤의 재정과 자산가치까지 계산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시대,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선제적 대응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구조적 변화를 미리 분석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 공모가 시작된 뒤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산업·주거·교육·교통을 묶은 지역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셋째, 광역정부와 자치구가 개별 대응하지 않고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전략을 세워야 한다.

넷째, 새로운 국가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공유재산 가치는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

새로운 재정의 물결이 만들어지는 전환기 일수록 지방정부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했는가’에서 갈린다.

이제 지방정부도 재정제도의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당장의 성과를 넘어 10년, 20년 뒤의 재정과 자산가치까지 계산하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물질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할 때다.

독자투고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누군가의 지나친 연락이나 행동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연락, 위치 확인, 원하지 않는 만남 요구처럼 상대방의 의사와 경계를 무시하는 행동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통제와 집착의 신호일 수 있다.

특히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은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도 상황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여성보호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위험 신호를 가법게 넘기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다.

경찰 역시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과 위험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호지원을 신속하게 연결해야 한다.

관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지만, 통제는 상대방의 선택을 빼앗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일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자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한미정 광주서부경찰서 여청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중수청·공소청 안정적인 운영이 우선이다

수사하는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공소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지방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했다. 그동안 검찰이 맡아온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새롭게 시작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 기관 사이에 업무 공백이나 책임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도 양 기관의 치밀한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이 뒤따라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에 동지를 둔 광주중수청은 1청장·1차장·3국·10과·4담당관 체제로 광주·전북·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훈·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외공직 수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출범 초기 인력은 정원 240명의 58.3%인 140명에 그치면서 초기 수사인력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물론 검사와 검찰수사관 일부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경찰 내부에서도 경감·경정급 수사 간부들을 중심으로 경력경쟁 채용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경찰 출신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이 뛰어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검사 출신과 비교해 임용 직급 및 처우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중수청 이직자와 사직자를 제외한 기존 인원으로 잔류하는 형태로 출발했다. 광주지검에서는 검사 1~2명과 수사관 50~60여명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본격적인 조직 개편은 90일간의 보완수사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광주공소청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기존 사건 6천 여건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공소업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수사 실무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참여 과풀이에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점이 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도의 이름만 바꾸는 조직 개편이 아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체납 급증, 이대로 뒤흔 안된다

학자금 대출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전남광주지역 청년들이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궁극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대학 시절 정부로부터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데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고용이 불안정해 상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값어 매우 답답한 실정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광주·전남 지역 학자금 대출 총체납 건수는 3천881건, 체납액은 53억5천400만원에 달했다.

이중 광주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5년 광주의 총체납 건수는 2천474건, 체납액은 34억7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천463건, 15억1천400만원과 비교하면 체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기한 내 정리되지 않은 미정리 체납액도 크게 늘었다. 5년 새 미정리 체납액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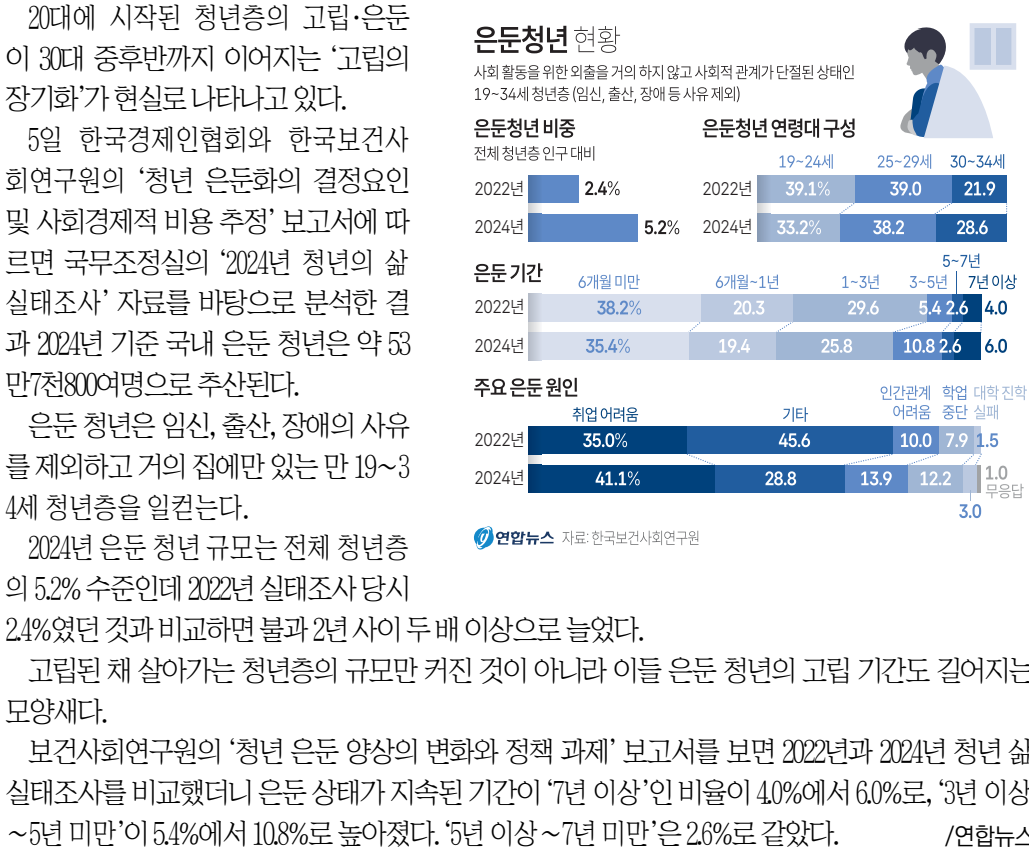
는 60% 증가했고, 체납액이 두배 이상 급증한 점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5년 전남지역 총체납 건수는 1천407건, 체납액은 18억7천800만원으로 2020년의 980건, 10억6천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미정리 체납액도 같은 기간 6억8천400만원에서 13억2천4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수치는 무엇보다 지역 경기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가법게 여기지 말고 졸업 이후 청년들이 마주하는 고용과 소득의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학자금 대출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짊어져야 할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경제계 또한 지역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체납액 증가는 단순히 청년 개인의 상환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

그래픽 뉴스

국내 은둔 청년 약 53만7천800여명 추산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